

비상경제장관회의

24-4-2

(공개)

민생 · 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

2024. 2. 26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. 민생토론회 주요내용 1

II.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

I. 민생토론회 주요내용

◆ 국민투자자, 서민차주, 취약계층에 “기회의 사다리”가 되어주는 금융

①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(금융위·중기부 협업)

-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신속히 경감*하고,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**을 통해 금리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

* [이자환급] (은행권) 약 188만명, 총 1.5조원 (중소금융권) 약 40만명, 총 0.3조원
[저금리 대환] 7%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.0%의 저금리대출로 전환

** (기존) 신용대출(237조원) → (개선) 주택담보대출, 전세대출 추가(+1,008조원)

※ 은행권 자체적으로 총 2.1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('23.12.21일)

→ 소상공인 이자환급 1.5조원 취약계층 지원(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) 0.6조원

-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절차 획기적 개선*

* (現) 센터 내방하여 이용시 최대 5일 → (改)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평균 30분 이내

②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(금융위·과기부·고용부 협업)

- 서민·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·활용 제한*, 금융·통신채무 통합조정** 등으로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

* 최대 298만명이 연체금액 전액상환시 지원대상에 해당 ** 최대 37만명 대상

-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('24.10월)

- 금융-고용 제도간 연계를 확대*하여 취약층의 경제적 자활지원

* 서민금융제도(금융위)와 고용제도(고용부)간 연계 확대(대상자 : 3천명 → 26만명) 등

II.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

1. 민생금융

□ (추진현황)

- (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대환)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추진
 - i) (은행권 이자환급) 은행권 자율적으로 약 188만명에게 총 1.5조원 환급* → 설 연휴 직전(2.5일~8일) 약 187만명에게 총 1.36조원 집행 완료
 - * (지원기준) 금리 4% 초과분의 90%, 대출금액 2억원까지, 차주당 300만원 한도
 - ii) (중소금융권 이자환급) 중진공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(금리 5~7% 적용 차주, 약 40만명)에게 총 0.3조원 환급 추진(1인당 최대 150만원 수령 가능)
 - iii) (저금리 대환 프로그램)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
 - (대상확대)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'심각' 단계가 유지되었던 '23.5.31일(現 '22.5.31일)로 1년 확대
 - (혜택강화)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.0%(現 5.5%)로 낮추고, 보증료 0.7%p를 면제
- (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)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을 기존 신용대출('23.5.31~)에서 주담대(1.9일~) 및 전세대출(1.31일~)까지 확대 완료
- (서민금융 종합플랫폼) 금융지원부터 고용·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플랫폼* 구축 진행

* ①(편리성확대)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,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정보수집 등 ②(정확성제고) 민간서민금융상품 연계확대, 보증서 발급 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 제공 등 대출연계절차 고도화 ③(접근성강화)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신설 등

□ (향후계획)

- (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대환) 既 발표한 「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방안」(‘24.1.31일)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
 - i) (은행권 이자환급) '24년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환급(약 0.14조원)
※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(6천억원 규모)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 발표 예정
 - ii) (중소금융권 이자환급) 3월말부터 매분기말 이자환급금 지급 (연내 완료)
 - iii) (저금리 대환 프로그램) '23.1분기 중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개편
- (서민금융 종합플랫폼) 전산개발, 테스트 등 종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'24년 6월 중 운영 개시

2. 상생금융

□ (추진현황)

- (신용회복 지원) 연체이력정보 공유·활용 제한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전산 개발 및 세부방안에 대한 금융권 협의 진행
- (금융·통신채무 통합조정) 통신업계와 금융·통신채무 통합조정 협약 가입 및 세부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* 진행
 - * 1~2월중 통신업계-신복위 3차례 협의 진행(이동통신 3사, 알뜰폰통신사 및 소액결제사)
- (개인채무자보호법) 차질없는 법 시행('24.10월)을 위한 TF 운영(1월)
 - 금융권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집행 TF를 통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권 사전 필요사항 점검
- (금융·고용 복합지원) 금융위-고용부 간 MOU 체결 및 「금융·고용 복합지원 방안」 발표(1.24일)
 -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금융·고용 복합지원을 위해 출장소 설치, 전산연계 등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지속

□ (향후계획)

- (신용회복 지원)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 정보 공유·활용 제한조치 시행(3.12일 잠정)
- (금융·통신채무 통합조정) 통신업계-신복위 간 업무협약(MOU)체결(3월), 세부 지원방안* 협의를 거쳐 금융·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(6월)
- (개인채무자보호법) 입법예고, 규제위·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,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*을 거쳐 법을 차질없이 집행
* 채무자보호법령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, 금융회사 전산개발, 직원 교육 등
- (금융·고용 복합지원) 금융·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('24.3월), 고용지원 제도 연계대상 확대(6월),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(하반기) 등 순차적으로 추진

□ (부처협업 관련)

- (금융·통신채무 통합조정)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의 지속 독려 필요